

全南日朝

호南
화 (주) 가운엔이 한께합니다

광주 시내버스 광고

문의 062-366-5002

제10279호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음력 6월 20일

"코로나때도, 이번에도 빠졌다" 반복되는 고려인 배제

대한고려인협, 대통령실에 재고 청원 코로나 지원금 이어 소비쿠폰도 제외 "평등권 침해 논란 소지 있어" 쟁점도 광산구·경찰 등도 지원방안 모색 나서

대한고려인협회가 정부의 민생소비쿠 폰 정책에서 고려인 동포들이 또다시 제 외〈본보 10일자 1면 "우린 한국인 아닌가 요" 소비쿠폰 제외된 고려인 눈물〉된 데 대해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재고를 요청 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에 이어 고려인이 반복적으로 정책에서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상 내 국인을 기준으로 15만~52만원의 소비쿠 폰을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 로 포함됐지만, 재외동포(F-4 비자) 소 지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거주자 4800 여 명 가운데 약 3700명이 이번 소비쿠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들 대부분은 제조 업·농장·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성실히 세 금을 내고 있다.

대한고려인협회(회장 정영순)는 지난 11일 청원서에서 "재외동포를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반복되는 차별적 조치"라며 "동포로서 성실히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만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소비쿠폰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원하는지 묻는 시험대"라며 "진정한 사회통합과 공 정 실현을 위해 대통령께서 F-4 비자 소 지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동포 전원에게 평등한 지급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13일 기준, 대통령실은 해당 청원 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 다.

고려인마을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천영 목사는 "정부의 소인쿠폰으로 지급되는 25만~50만 원은 주민들에게 생활비로서 상당한 금액"이라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외되면서 공동체 내부의 실 망과 피로감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같은 배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 금 지급 당시에도 재외동포·난민 인정자 등은 제외됐고, 고려인마을은 마스크 배부와 백신 예약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난민 인정자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조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난민인정자는 이번 소비쿠폰에서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판례가 고려인 배제 문제 또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 토할 근거가 된다고 제언했다.

모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행정적 편의나 국적을 이유로 역사적·문화적 연 대가 있는 동포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고려인은 단순한 다문화정책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므로,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지 헌법적 기준에 따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말했다.

김은채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부대표 역 시 "현행 재외동포법이 해외 거주 동포 중 심으로 설계돼 있어 국내 고려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정책을 국적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실적 제약이 크 다. 광산경찰서도 고려인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명수광산구의회의장은 "고려인들은 영주권은 없지만 지역사회 산업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면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폭염 물러가고 소나기

▶관련기사 6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연일 지속된 가운데 휴일인 13일 광주지역에 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가 내려 시민들이 쏟아지는 빗속에 광주 동구 충장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양배 기자

의대생들,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 선언

의대협 "학사정상화 대책 마련을" 숲 총리 "결실의 길 찾겠다" 환영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 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 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 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

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 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 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 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 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 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복귀 시점은 구 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와 의협, 의대협은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 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 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지

